

여야 '증언 회유' 공방... 707 작전관 "케이블 타이는 포박용"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 여야 충돌 합참 계엄과장 "압박감 느꼈다"...국힘 "홍장원 체포 명단 의문"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가 여야의 진실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여야는 일부 증언의 신빙성 문제에 대한 다툼을 이어가고 있고, 일부 관계자에 대한 회유 여부를 집중 공략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대립점을 치르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여야는 25일 5차 청문회를 앞두고 지난 21일 진행된 4차 청문회에서 '권영한 당시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을 여당이 회유하려고 했다'는 야당의 주장을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권 과장을 향해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 전날 권 과장에게 '청문회 30분 전에 만나자'고 제의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회유로, 압박을 위한 사전 공작"이라고 지적했다.

권 과장은 이에 "(의원실이) 청문회 30분 전에와 미리 보자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압박감을 느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임종득 의원은 "보좌진이 정상적 절차로 대면 설명을 요구한 것"이라면서 "적화하장이다. 김 의원은 광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을 찾아가 유류브를 찍으며 회유한 의혹이 있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은 "임종득 의원이 권 과장들의 대화 내용을 김 의원이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고 했고, 김 과장은 "자문을 구하는 변호사가 있다"고 답했다.

강선영 의원은 이날 밤 이 사례와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계엄 해제를 조언하자 "일머리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권 과장의 청문회 증언을 다시 화제로 올렸다.

이어 "안규백 위원장이 '일머리가 없다' 발언을 국방위 현안질의 때부터 알고 있었고 오늘은 김 의원이 임종득 의원의 관련 내용을 사전에 알았다. 당당하면 어떤 것도 물을 필요가 없다"며 추가 질의 시간을 요청했다.

이에 안규백 특위 위원장은 "당시 언론에 난 것을 보고 말한 것인데, 강 의원이 마치 내가 계엄과장과 내통한 것처럼 말한다"고 항의하며 요청을 거절했다. 결국 이 과정에서 여야 간 고성아 오갔고, 여당 의원들은 밤 9시 40분께 퇴장한 뒤 밤 11시 40분

까지 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복귀하지 않았다.

이날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가 담겼다는 '체포 명단 메모' 증언을 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을 놓고 신빙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장 의원은 홍 전 차장이 전날 탄핵 심판에서 공개한 1차 메모를 들어 보이며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의 전화를 받고 받아적은 것이 아니라 신의 계시를 받은 것 아닌가"라며 "이런 걸 바탕으로 그 다음 메모가 진화했다. 단백질 덩어리가 사람으로 진화한 것으로, 그런 증거를 중요한 대통령 탄핵 심판과 내란죄 형사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전날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에 잇달아 출석한 것과 관련해 "보통 재판 기일을 잡을 때 당사자가 다른 재판을 받고 있으면 기일을 동시에 잡나, 피해서 잡나. 당연히 조정해야 한다"고 따지며 재판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전날 국방위에 이어 이날 청문회에서도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장이 지난 6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케이블 타이는 국회 문 봉쇄용'이라고 주장한 것을 두고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국회에 출동한 계엄군이 소지했던 케이블 타이를 들고나와 "이건 수갑이며, 사람을 무도록 설계가 돼 있어 구조상 문을 봉쇄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은 707 특수임무단 작전관은 작전 수행시 휴대하는 케이블 타이의 용도를 묻는 국민의힘 광규택 의원의 질문에 "오늘 보신 것은 포박용이 맞다"고 답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윤 대통령 측이 국회 봉쇄 지시가 테러리스트 등에 방어하는 개념이냐고 질문하니 김 단장이 '맞다'고 답했지만, 계엄 당시 (지휘부) 단체대화방에선 '진입 시도 의원이 있다. 막으라'고 했다. 현재에 나가 거짓 진술을 했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권영한 전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이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규백 위원장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도층에서 69% ...尹 탄핵 찬성 여론 높아졌다

한국갤럽 여론조사
국민의힘 34%·민주 40%
이재명 34%·김문수 9%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이 60%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찬성' 응답이 60%, '반대' 응답이 34%였다.

직전 조사(2월 11~13일)와 비교해 탄핵 찬성 응답은 3%p 상승했고, 반대는 4%p 하락했다.

민주당 지지층(393명)의 98%가 탄핵에 찬성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의 83%가 탄핵에 반대했다. 성향별로는 보수층(314명)에서 탄핵 찬성 25%·탄핵 반대 69%였다. 진보층(264명) 93%는 탄핵에 찬성했으며 6%는 반대했다. 중도층

(308명)의 69%가 탄핵에 찬성, 25%가 탄핵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중도층의 탄핵 찬성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34%, 더불어민주당 40%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39%, 민주당 지지도가 38%였던 것과 비교해, 국민의힘은 5%p 하락하고 민주당은 2%p 상승했다. 이밖에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2%, 진보당·이외 정당 등 각 1%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18%였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34%),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9%), 홍준표 대구시장(5%),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오세훈 서울시장(4%), 조국 전 조국혁

신당 대표·개혁신당 이준석 의원(2%) 등 순이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은 각각 1%를 기록했다. 특정인을 언급하지 않은 비율은 32%였다.

차기 대선 결과에 대한 질문에 '헌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37%, '헌 정권 교체에 대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53%였다. 직전 조사 대비 '정권 유지' 응답은 3%p 하락, '정권 교체' 응답은 2%p 상승한 수치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4.1%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하면 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 청년위·먹사니즘 조직 정비...조기대선 대비 '몸풀기'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전국 청년위원회와 '먹사니즘'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내건 전국 조직을 잇따라 띄우는 등 조기 대선에 대비한 전열 정비에 나섰다.

친명(친이재명)계 원외 조직 '먹사니즘 전국 네트워크'가 이날 국회에서 발대식을 열었다.

이재명 대표는 발대식 영상 축사에서 "민주당은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 새롭고 긍정적인 성장 동력을 바탕으로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 전국 청년위원회 발대식과 대학생위원회 발대식도 이날 열었다.

민주당에 대한 '이대남' (20대 대학생 남성)의 인식이 부정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청년 표심이 대선 판도를 가를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한층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이날 출범한 조직들은 향후 조기 대선 국면에서 전국 조직으로서 보폭을 더 넓힐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2천만뷰 돌파** 



투표하는
당신의 발걸음,
새마을금고의
든든한 밑거름

투표함

제 1 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선거일
2025. 3. 5.(수)

투표시간
직접 선출 : 오전 7시 ~ 오후 5시
총회·대의원회 선출 :
금과와 협의하여 정한 시간 ~ 오후 5시

 자세한 선거정보 등 확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we-info.nec.go.kr 방문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1390